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

(2010. 1. 18)

서 근 우

I.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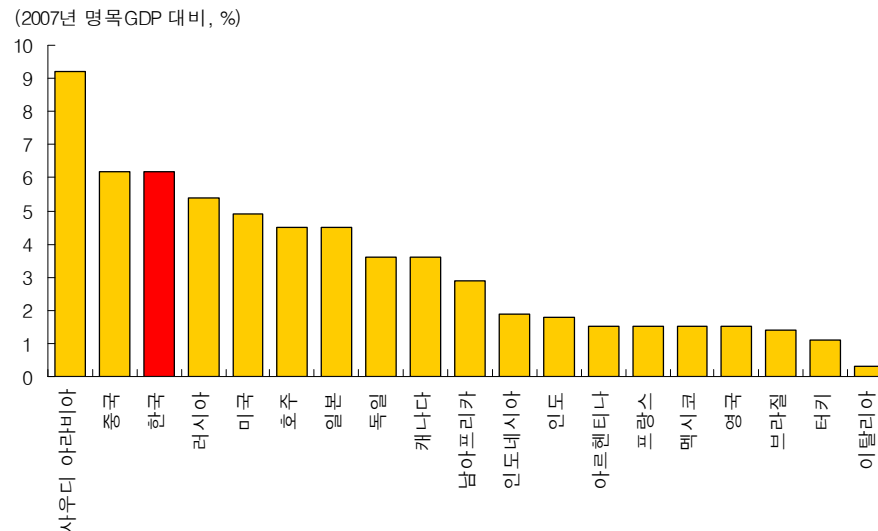
1. 비상경제정부 운영

-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 출범(2009. 1. 2)
 - 모두 40여 차례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방안, 친서민 세제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2.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

- 2008년 11월 30년 만의 첫 수정예산으로 10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편성
- 대폭적인 세제지원 : 노후차량 교체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완화

<주요국 2008-10년 경기부양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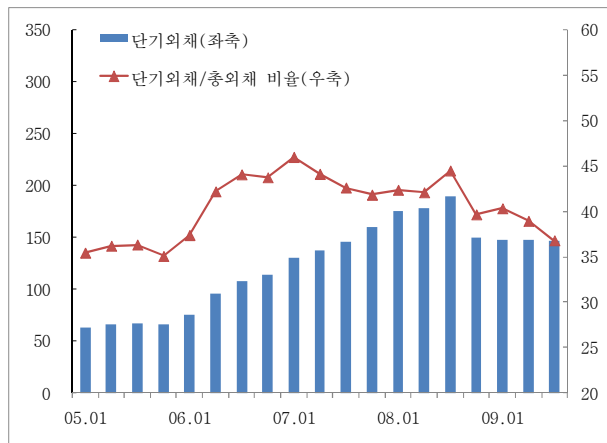
자료: IMF

I.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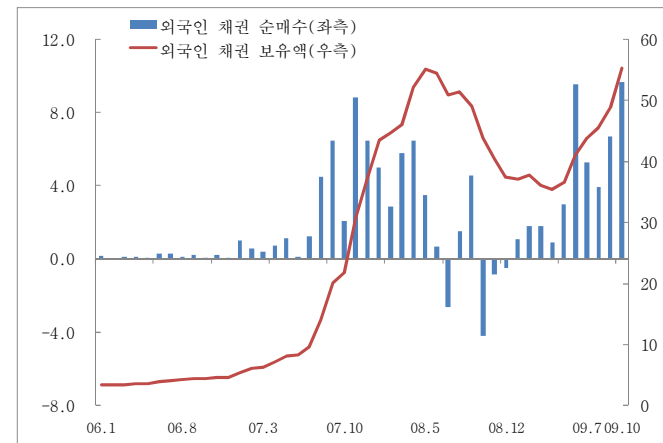
2.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

- 금리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 :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인하(5.25%→2.00%)하였고, 금년 1월 현재까지 2.0%를 유지
 -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등을 통해 2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였고, 한.미 통화스왑자금 공급 등을 통해 최대 422억달러(09.1월 말)의 외화유동성을 시장에 공급
-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 :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보증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하고, 신·기보 등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을 15.5조원 증액
- 다각적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 :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을 지원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급보증(08.10.19) 조치

<단기외채 동향>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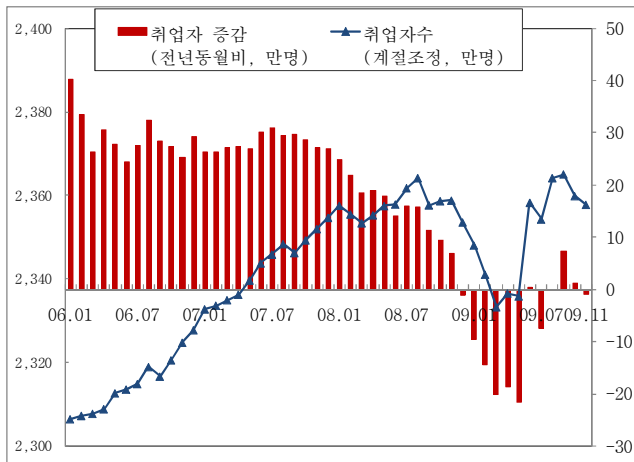


I.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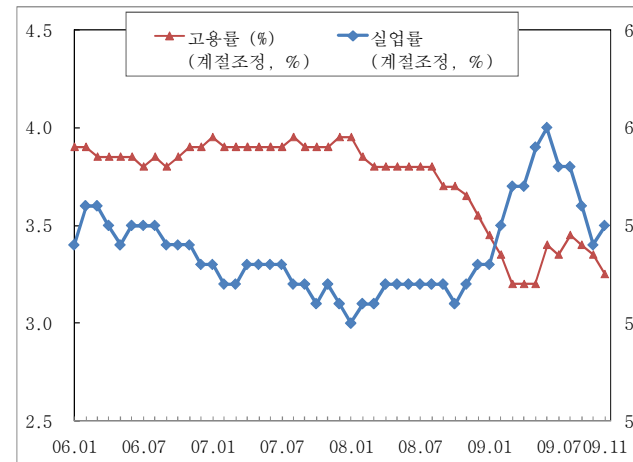
3. 서민생활 안정책

- 일자리 나누기 확산 : 공공기관 대졸자 초임을 인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방안 추진
-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공공 부문 청년 인턴제를 도입했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도록 지원
-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금융위기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보장도 강화
 -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09.3.12)을 수립해 맞춤형 생계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를 확대(2008년 153만명→2009년 159만명)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연장

<취업자 증감 및 취업자수 추이>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I.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4. 적극적 국제공조

- G20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 G20 재무장관회의 ·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09.3.17, 4.2, 9월)
 -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금년 G20회의 개최국으로 선정
- 국제금융기구와 적극 공조 : 정부는 ADB · EBRD 등 각종 국제금융기구와 적극 공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지 적극 표출
 - 아시아협력 강화 : ASEAN+3 공동의장국(한국 · 태국)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합의를 도출(09.5.3)하고, 역내 금융협력 논의를 주도
- FTA 확대 :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국인 EU와의 FTA 협상을 타결

5. 대통령의 정상외교

- G20 정상회의에서의 적극적 역할 : 글로벌 경제이슈 논의에 있어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가교역할도 활발하게 수행
 -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
- 아시아 및 한 · 중 · 일 협력 강화 :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해 미국 · 일본 · 유럽 등에 집중됐던 국제협력의 지평을 확대
 - 한 · 중 · 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1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아시아의 미래비전을 제시

I.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5. 대통령의 정상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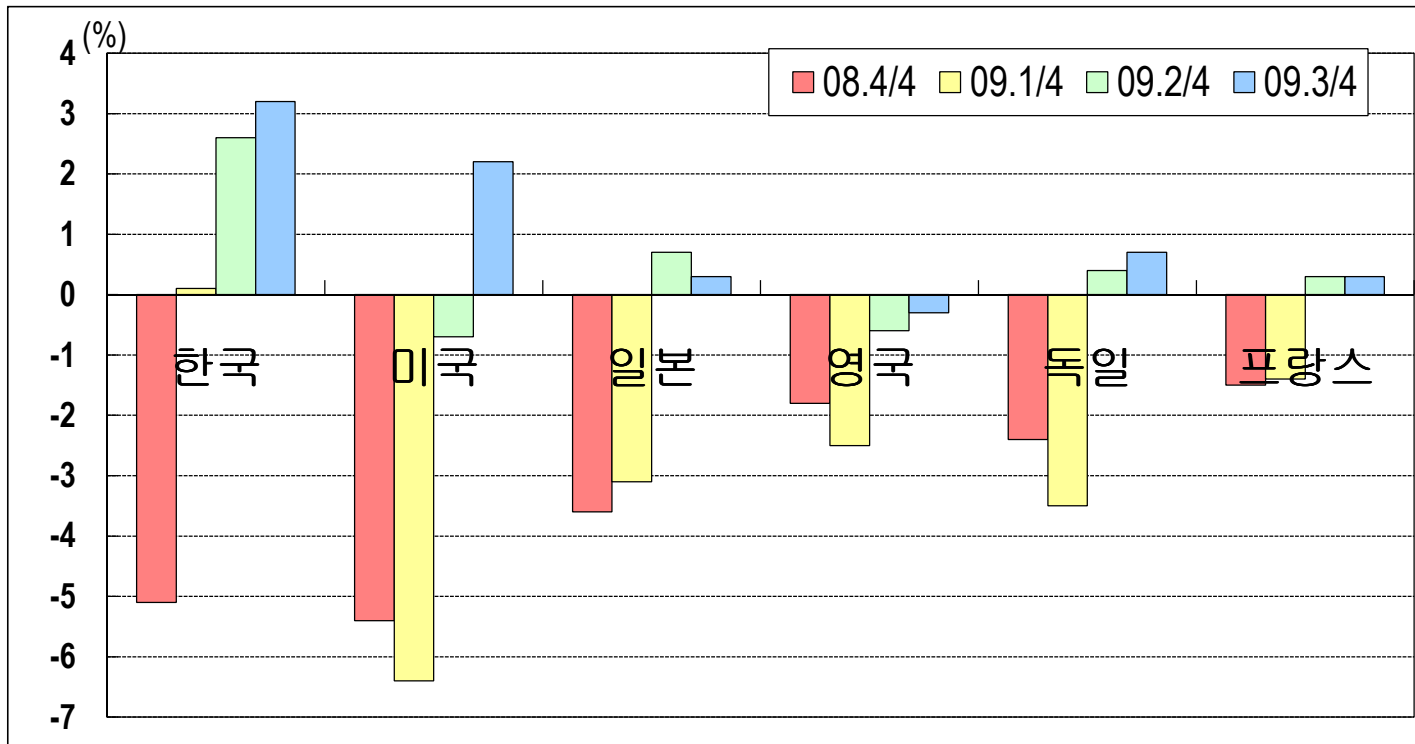
- 기후변화 . 녹색협력 확대 :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실질협력도 강화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과 협력기반을 구축
 - G20 정상회의와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홍보
- 에너지 . 자원협력 기반 확충 : 에너지·자원 전략 국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자원 협력에 주력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과 유전·광물자원의 공동개발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
-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 전개 : 런던 G20 정상회의 참석 전후를 계기로 글로벌 언론에 대한 집중적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전세계 여론 주도층과 소통

II. 금융위기 1년의 경제적 성과

1. 경기 회복세 가시화

- 2009년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 경기 급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한국경제는 2009년 2/4분기에 2.6%의 성장률을 나타낸 후 3/4분기에 더욱 높은 3.2%의 성장률을 기록
 - OECD 30개국중 전기대비 성장률이 2008년 4/4분기중 29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2009년 1/4분기 3위, 2/4분기 2위, 3/4분기 1위로 급상승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전기 대비) >



II. 금융위기 1년의 경제적 성과

2. 내수부문의 개선

-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내수 부진도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
- 2008년 4/4분기까지는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의 악화로 국내총소득(GDI)이 급락했으나, 환율 안정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GD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
- 민간소비 : 소비관련 지표들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부진이 빠르게 완화
 - 승용차 세제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도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
- 투자부문 : 극도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환율안정에 따른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 및 수익성 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극심한 위축에서 벗어나는 조짐

3. 금융시장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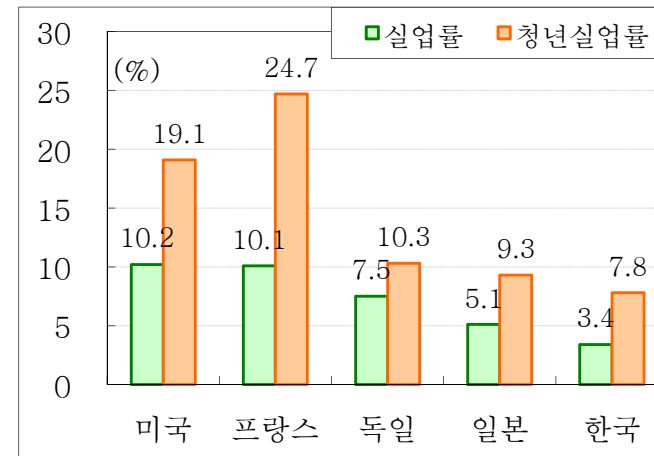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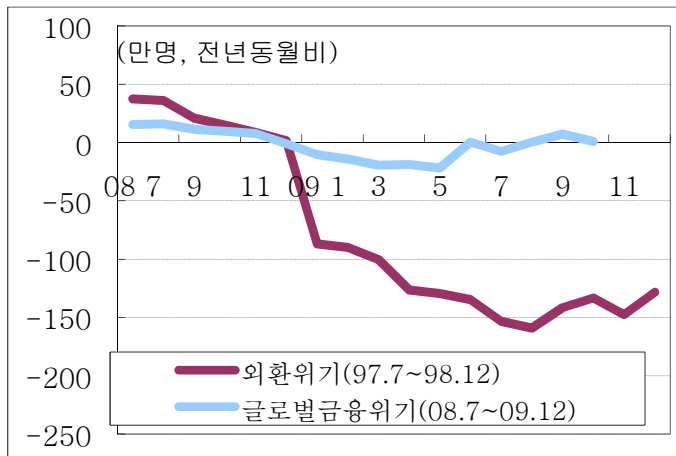
- 국제 금융시장 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2009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
- 주가 . 환율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시장금리는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

II. 금융위기 1년의 경제적 성과

4. 급격한 고용악화 방지

- 10년 전 과거 외환위기시에 비해서 고용사정 악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

<외환위기시와 취업자 증감 비교> <주요국 실업률·청년실업률 비교(09.10.)>



5. 대외부문 선순환 구조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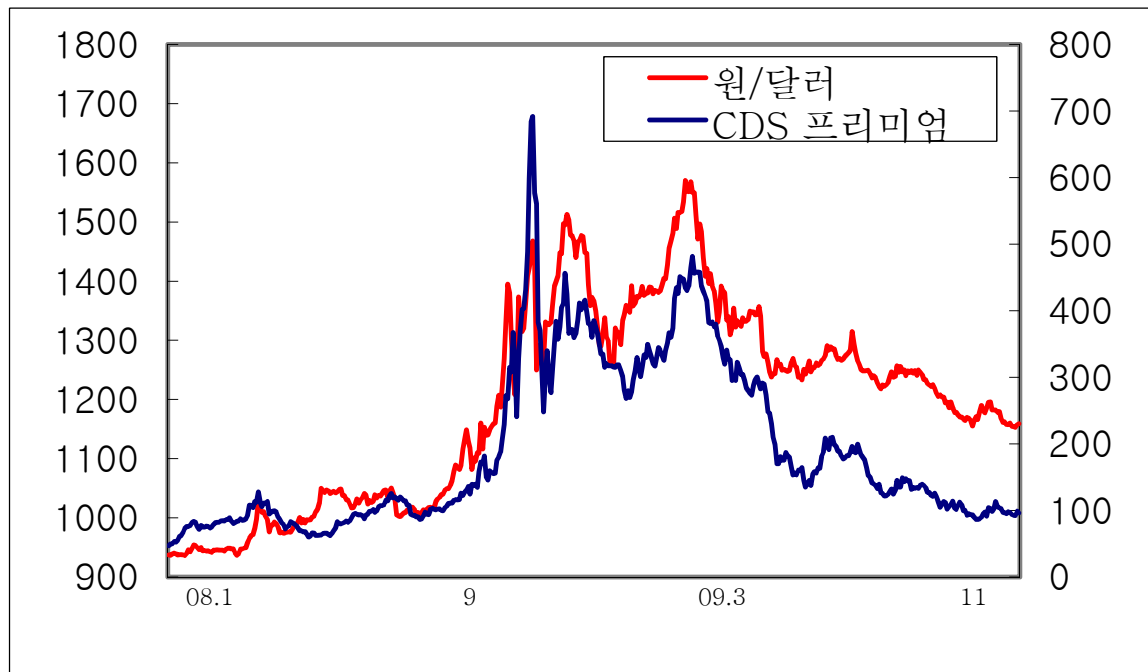
- 2009년 2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여 1-10월중 370억불 흑자를 시현
 - 외환보유액은 2008년 11월말에 2,005억불 수준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1월에 2,709억불을 기록
- 2009년에 들어서도 -20%대의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 및 상품수지 흑자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II. 금융위기 1년의 경제적 성과

6. 대외 신인도 회복

- 2009년 2월 437bp수준으로 상승하였던 외평채CDS 프리미엄이 2009년 10월에는 102bp수준으로 하락하여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2008년 1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하였던 Fitch사는 2009년 9월 1일 다시 안정적(stable)으로 환원
 - Fitch사는 2009년도에 신용등급 및 전망을 27건 하향조정한 반면 상향조정은 한국과 우루과이 등 단 2건에 불과

<원/달러 환율 및 CDS 프리미엄>



III.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정책과제

1.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반면, 발생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강점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경제 구조
 - 금융위기 극복 이후 한국 경제에 남겨진 과제는 경제구조의 선택이라는 과제
 - 장기적 경제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십년간 활용할 경제 운용의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필수
 - 97-98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
 - 자유주의 시장경제모델은 호황기에는 높은 경제 성장을 시현이 가능하지만, 개별 기관의 이익 극대화가 거시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문제점도 보유

2.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그때까지 남아 있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1997-1998 IMF 경제위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경제정책 체계의 본격적 채택의 계기
 - 금융억압을 해소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운용의 민간 자율화, 국제화가 본격화되면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이 탄생
 - 정부부문의 시장 간섭 최소화가 경제운용구조의 특징이 되었으며, 정부는 제도 및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
 - 기업 및 금융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충했으며, 전세계적인 확장적 금융정책은 장기 호황을 가능하게 했음.

III.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정책과제

3.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적 편입을 위한 규제 개혁의 결과, 금융부문 등 민간부문의 과도한 risk taking 및 이에 대한 비용 부과장치 제거

- 은행 및 기업의 리스크관리 체계 및 역량에 대한 정책당국의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체계에 취약점 노출(risk taking의 외부 불경제 효과)
- 지나친 규제완화 및 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화된 공공부문의 역량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부 회복되었으나, 론스타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부문의 의지 약화로 사실상의 조기경보 시스템 붕괴

4. 2007-2008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확장적 금융정책 등 거시정책의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

- 경제 위기 초기에는 금융감독체제의 취약점 등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다양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결론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
-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전체의 문제이므로 한국 독자적으로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
- 금년중 G20 등 국제회의에서 어젠더로 선정하여 논의할 경우 한국이 구조개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I.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정책과제

5. 경제 위기에 대한 사전 방지 효과를 위해 정부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 회귀할 수는 없는 상황

- 이미 강력해진 시장과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장의 힘을 축소하고 정부가 나서서 경제운용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 경제위기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 혹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선택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
- 중국처럼 정부 주도형 자본주의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형이 되더라도 경제구조의 복잡성과 정부 역량을 감안할 때, 현대 경제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전망

6. 현실적 선택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모니터링 기능과 도덕적 설득 및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사후적 조정기능 정도가 최대한의 정부 역할이 될 가능성

- 최근의 전세계 주요국의 정치 . 경제 지도자들은 경제위기를 막는데 급급한 상태
 - 대형은행의 국유화나 대규모 통화 증발(QE)은 긴급조처일 뿐 심사숙고 끝에 선택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프로그램은 아님.
-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 지도자들이 자유시장 원칙을 대체할 일관성있는 정책체계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III.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정책과제

7. 사전적 위기방지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능과 역량이 대폭 확충된 사후적 위기극복 수단은 제대로 작동

- 신보, 기보 등 강력한 대형 신용보증기구, 자산관리공사, 산은, 기은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은 경제 위기시 나름대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폭 넓게 제공
- 이들 기관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위기 극복 경험 역시 2008-200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절하게 활용

IV.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모색

1. 단기적으로는 규칙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체제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운용체제로 경제운용의 방향이 전개될 전망
 -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투명한 법체계가 경제운용의 핵심기반이었으나, 당분간 행정부의 재량 판단에 의한 경제운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잡힐 때까지는 크고 작은 기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부의 탄력적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인력 및 권한 보강, 정보수집 체계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
 - 경제위기시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시장기능의 보완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현황 파악, 위기 대응책 수립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정부 기능의 확충 및 보강이 필요
2.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규칙을 중시하는 금융시장 운영방식이 퇴조하고 정부 재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원칙 중심의 금융시장 운영방식으로 전환중
 - 대처, 레이건 이후 영업행위 규제는 최소화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건전성 감독 위주의 금융정책체계가 지난 20~25년간 유행
 - 대처 시대 이후 금융정책은 1986년의 "Big Bang"으로 알려진 금융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금융중개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중개기관의 수익이 급증하기도 했으나 지나친 risk taking의 결과로 서브 프라임 위기 초래

IV.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모색

3. 위기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바젤 II 등 규칙(Rules)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정책흐름에서 벗어나 재량 (Discretion) 혹은 원칙(Principles)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
 - 원칙(Principles)과 재량, 탄력성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는 원칙을 중시하는 유럽식 회계원칙 IFRS를 전세계적으로 수용할 준비중
 - 원칙중심 금융정책체계에서 정부가 원칙만 제시하는데 그칠 경우 금융시장 혼란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해설 및 Guide Line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할 필요

4.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 및 산업부문 R&D 투자를 강화하고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
 - 미래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에 대한 기초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
 - 항만, 공항 등 사회적 인프라 외에도 의료, 교육시설, 생활 및 산업용수 확보 등 물적 생활기반의 안정성 제고도 요구되는 상황
 -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 장기적 근무여건 조성 등 공공부문의 역량 확충이 필요

IV.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모색

5.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준비, 투자를 위한 경제운용방향 및 이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

- 국가경제의 생존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정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 및 탄력성, 충격 흡수능력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 관련 정부 정책이 중요한 시기
- 도약의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필수적
- 재정적자가 막대하고 은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실물부문에 대한 탄력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확충, 건전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경쟁적 자산 증대는 자제할 필요
 - 특히 실물부문의 수요를 벗어난 금융부문만의 지나친 확장은 자제할 필요